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의 이념 및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 ③ 공시제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⑤ 영업양도 및 회사의 합병·분할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유지라는 상법이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2. 상법상 상인과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기명의로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
-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③ 회사가 아닌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의 상인에 대해서는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와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모두에게 하여야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 ⑤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대가는 위탁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 ③ 물건의 매수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은 위탁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상인이더라도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 ④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위탁매매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확정기매매위탁계약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위탁매매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인인 매수위탁자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4.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호계산은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제도로서 상인 간에만 적용된다.
- ② 상호계산기간은 6개월로 하며 당사자가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
- ③ 어음·수표로 인한 채권채무는 상호계산에 계입될 수 없다.
- ④ 상호계산제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⑤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각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상법상 상행위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②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에 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해서 유질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연 6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6.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회사가 상이한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일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 ㄴ.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 ㄷ.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설립시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ㄹ.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인 영업주의 거래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 ㅁ.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호를 등기한 자만이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ㅁ
- ⑤ ㄹ, ㅁ

## 7. 상법상 새로운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직접 공급자에 대하여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 매입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8. A는 상인 B로부터 물건판매의 중개를 위탁받은 대리상이다. 상법상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A는 해당 거래의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B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B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② A는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하여 그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 ③ A의 B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의한 보상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A는 B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B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⑤ 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A와 B는 2개월 전에 예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9. 상법상 합병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회사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사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사원의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사원 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사원이 사망한 경우 정관에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 ④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권 또는 회사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업이 금지된다.
- ⑤ 판례에 의하면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정관의 기재가 실제로 변경된 때로 본다.

## 10.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그 지분의 일부를 취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 ④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
- ⑤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11. 상법상 주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주주가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하여 제출한 주권을 회사가 무효로 한 경우에는 그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 ③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판례에 의하면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12. 상법상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을 안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13. 상법상 1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되지 않지만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된다.
- ② 1인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 ③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1인주주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1인주식회사는 이사회 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④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인 대표이사가 임무위반행위로써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⑤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가 회사 소유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14. 甲주식회사는 2018년 5월 10일 설립되었는데 2019년 2월 24일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甲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고 그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甲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회사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④ 甲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나중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원래의 양도통지일에 소급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⑤ 甲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15.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③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위임해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 ④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판례에 의하면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주주총회일의 3일 전보다 늦게 도착하였다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허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6.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는 영업양도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④ 주식매수청구를 받으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⑤ 영업양도를 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상대방인 영업양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17. 상법상 회사에 대한 주주의 회계감독권 중 단독주주권이 아닌 것은?

- ① 회계장부 열람권                      ② 영업보고서 열람권
- ③ 대차대조표 열람권                ④ 손익계산서 열람권
- ⑤ 감사보고서 열람권

18. 상법상 종류주식과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례에 의하면 어느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의 지위가 정관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 정관변경에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②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③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그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된다.
- ④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그 종류주식을 가진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⑤ 관례에 의하면 정관변경에 필요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19.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주주명부에는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 ② 회사는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관례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료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20. 상법상 다음 각 주식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회사가 전환권을 가진 전환주식을 전환하여 발행하는 주식 -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
- ② 전환권을 가진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여 발행되는 주식 - 전환을 청구한 때
- ③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행되는 신주 -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
- ④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 주식교환계약서에서 정한 주식교환을 할 날
-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포괄적 주식이전을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 - 주식이전계획서에서 정한 주식이전을 할 날

21. 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주총회에서 회의를 연기할 것을 결의한 경우 연기하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그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감사인 주주는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④ 관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⑤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가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직계존속
-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하였던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 발기인 A는 甲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B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회사설립등기를 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B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이 경우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으므로 주식인수대금 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② 주식인수대금 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설립절차상의 다른 하자가 없는 한 甲회사 설립의 효력이 있으며 A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③ A가 납입한 돈은 일단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A가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甲회사는 A에 대하여 주식인수대금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A가 인출한 납입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B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24.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과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 ② 회사가 집중투표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서 이사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상법상 이사의 최장기 임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이사가 해임되더라도 그 이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 임기 만료 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25.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사의 배우자
  - ② 이사의 직계존속
  - ③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④ 이사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의 자회사

26.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의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 ④ 이사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 한하여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의 직을 겸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에 한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7. 상법상 상장주식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모회사의 감사는 당해회사 이사의 직을 겸할 수 없으나 자회사의 이사의 직을 겸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위원은 경업금지의무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감사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28. 상법상 주식회사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ㄱ. 합병	ㄴ. 해산판결	ㄷ. 파산
ㄹ. 해산명령	ㅁ. 분할	ㅂ. 주주총회 특별결의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ㄹ, ㅂ
- ④ ㄷ, ㄹ, ㅁ
- ⑤ ㄹ, ㅁ, ㅂ

29.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과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 ③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으로 한다.
- ④ 집행임원은 이사회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0.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② 회사성립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④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31.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회사가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감자하는 경우 그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④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회사와 주주가 협의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⑤ 감자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이 감자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32.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청구가 금지된다.
- 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그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3.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지어음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약속어음의 경우 주채무자가 존재하지만 환어음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상환의무자이지만 환어음의 발행인은 상환의무자가 아니다.
- ③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인수가 거절되면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환의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환어음을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인, 수취인만이 기재되지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기재된다.
- ⑤ 약속어음은 설권증권이지만 환어음은 비설권증권이다.

34. 환어음 또는 수표가 무효로 되는 것은?

- ①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에 이자약정을 기재한 경우
- ②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 ③ 일람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이 이자약정을 기재한 경우
- ④ 환어음의 발행인이 분할출급을 기재한 경우
- ⑤ 환어음의 발행인이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35. 환어음의 인수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 ② 환어음이 제3자방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없다.
- ③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환어음을 소지한 자는 그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할 때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 ④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을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 ⑤ 지급인은 환어음의 소지인에게 첫 번째 인수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인수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6. A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B는 피배서인란을 공란으로 둔 채 C에게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C가 어음을 다시 D에게 양도하거나 직접 어음을 가지고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명채권양도방식은 고려하지 않음)

- ① 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에 D의 명의를 기재한 후 배서하지 아니하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 ② 피배서인란을 공란으로 둔 채 C가 직접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C는 적법한 어음의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 ③ 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에 C 자신의 명의를 기재한 후 배서하지 아니하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 ④ 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 ⑤ 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다시 배서하여 교부함으로써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37. A는 B로부터 전자부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B에게 발행하였으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후 B는 “추심을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위 어음을 다시 C에게 배서하여 교부하였고 C는 어음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의 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A, B, C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B가 행한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
- ② C가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 A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③ C는 다시 “추심을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타인에게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④ C가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C는 B의 대리인으로 추정된다.
- ⑤ B가 C로부터 어음을 회수하였다면 B는 C에게 행한 배서를 말소하지 않아도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8. A는 B로부터 인수를 받은 후 만기 2019년 2월 19일인 환어음을 발행하였다. 인수인 B의 지급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9년 2월 18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는 공휴일이 존재하지 않음)

- ① B가 2019년 2월 18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지만 외형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제시한 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 B가 2019년 2월 21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지만 외형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제시한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③ B가 2019년 2월 22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지만 외형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제시한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한다.
- ④ B는 2019년 2월 21일까지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함으로써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한다.
- ⑤ B가 2019년 2월 18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려 하는 경우 어음상 권리자는 이를 수령할 의무가 없다.

39.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발행인은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 ③ 수표에 일람출급에 위반되는 문구를 적은 경우 그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인의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 ⑤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없다.

40. A은행에 정기에금을 들었던 B가 만기에 예금을 해지하면서 현금 대신 A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이 공란인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은 A은행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줄 것을 의뢰한 B이다.
- ②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B가 수표금의 지급중지를 A은행에 청구하는 행위는 수표법상의 지급위탁의 취소행위에 해당한다.
- ③ B가 지급제시 없이 자기앞수표를 1개월 동안 보관하던 중 마음을 바꾸어 A은행에게 자기앞수표를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한 경우 A은행은 수표금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④ B가 1개월 동안 자기앞수표를 보관하다가 C에게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B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⑤ B가 C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앞수표를 C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하고 자기앞수표를 C에게 교부하면 B의 외상대금채무는 그 시점에 소멸한다.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②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⑤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② 세법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거래 중 국외 제공 용역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④ 5억원 이상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3.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
- ②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 순서에 관계없이 그 담보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③ 소득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소득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 ④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 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환급금을 총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총당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총당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에 우선 총당하여야 한다.
- ② 국세환급금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총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총당할 수 있다.
- ③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국세환급금의 총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④ 국세환급금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총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세법개론

6.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③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7.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가산조정금액과 차감조정금액의 차이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전기까지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내 용	금 액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500,000원
(2) 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 중 한도초과액	300,000원
(3) 비용으로 처리된 교통사고별과금	400,000원
(4) 비용으로 처리된 기부금 중 한도초과액	500,000원
(5) 수익으로 처리된 재산세환급액(전기 납부분)	600,000원
(6) 수익으로 처리된 재산세환급액에 대한 환급금이자	50,000원
(7) 자본조정으로 처리된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00원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1,800,000원
(9) 이월공제가능 기간 이내의 이월결손금	1,300,000원

- ① 2,650,000원      ② 3,150,000원      ③ 3,350,000원
- ④ 4,650,000원      ⑤ 6,450,000원

8.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①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공정가치 700,000원)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500,000원)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2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로 조정하였다.
- ② 전기 초 2년분 임차료 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전액 비용으로 처리 후 당기 말 250,000원을 (차)임차료비용과 (대)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로 조정하였다.
- ③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 1,500,000원을 손금산입·기타로 조정하였다.
- ④ 유형자산의 임의평가이익 2,000,000원을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손금산입·△유보와 손금불산입·기타로 각각 조정하였다.
- ⑤ 비용으로 처리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중 실제발생이 분명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1,000,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의유출로 조정하였다.

9.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접대비 관련 자료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접대비 해당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고,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 장부상 매출액은 15,000,000,000원으로 이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8,000,000,000원이며, 일반매출액은 7,000,000,000원이다. 매출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매출에 대한 매출할인 50,000,000원이 매출액에서 차감되어 있다.
- ② 일반매출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금액 3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중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50,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① 전기에 접대가 이루어졌으나 당기 지급시점에 비용처리한 금액 : 4,000,000원
- ② 문화접대비 : 10,000,000원

(3) 직원이 조직한 단체(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하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 6,000,000원

(4)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천분의 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① 4,840,000원      ② 5,764,000원      ③ 10,840,000원
- ④ 13,470,000원      ⑤ 17,700,000원

10.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000,000원

(2)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12,000,000원
- ②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15,000,000원

(3)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전액 현금지급)

내 역	금 액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3,000,000원
대표이사 대학동창회 기부금	2,000,000원

(4) 당기 중 국가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현금으로 구입한 토지 : 취득가액 70,000,000원, 취득시 시가 50,000,000원

(5) 제15기(2015.1.1.~2015.12.31.)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이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10,000,000원

- ① (-)6,500,000원      ② (-)5,000,000원      ③ (-)1,000,000원
- ④ (+)2,000,000원      ⑤ (+)4,000,000원



# 세법개론

16.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의 순서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②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결손금이월공제가 적용된다.
  - ③ 법인은 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 ④ 중소기업이 전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⑤ 결손금소급공제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17. 영리내국법인 (주)갑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이다. (주)갑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할 경우 제19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 외국자회사 : A법인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함)  
 (2) 투자지분 : 의결권 있는 주식의 40% (2017.1.1. 취득 후 지분을 변동 없음)  
 (3) A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은 1,000,000원(원천징수세액 100,000원 포함)이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900,000원      (대) 영업외수익 900,000원  
 (4) A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3,000,000원  
 (5) A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 500,000원  
 (6) (주)갑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00원이며, 이월결손금은 없다.

- ① 100,000원
- ② 120,000원
- ③ 200,000원
- ④ 266,666원
- ⑤ 300,000원

18. 영리내국법인 (주)갑(중소기업)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최저한세 적용 후 제19기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은 모두 얼마인가?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198,000,000원  
 (2) 위 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항목 5,000,000원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포함되어 있다.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000,000원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최저한세 대상) : 7,800,000원  
 (5) 외국납부세액공제 : 1,000,000원  
 (6) 최저한세 적용시 조세특례의 배제는 경정시 배제순서를 따른다.

- ① 6,390,000원
- ② 7,390,000원
- ③ 7,800,000원
- ④ 8,390,000원
- ⑤ 9,800,000원

19.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 ② 내국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④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설 내국법인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⑤ 중간예납의무자는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②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 ④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 ⑤ 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 거주자 갑의 2019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2019년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금액 중 금융소득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구 분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이자소득		15,000,000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이 포함되었으며, 나머지는 정기예금이자임.	5,000,000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음.
배당소득	Gross-up 대상	7,000,000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임.	
	Gross-up 비대상	3,000,000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으로 구성됨.	6,000,000원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금액 중 금융소득금액
①	4,050,000원	31,770,000원
②	3,500,000원	31,770,000원
③	4,050,000원	36,770,000원
④	3,500,000원	36,770,000원
⑤	4,820,000원	36,770,000원

2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님)의 2019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1) 손익계산서상 소득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1,000,000원
- (2)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주요 수익항목
- ① 2019년 8월 17일 발송한 위탁상품 매출액 2,000,000원(원가 1,200,000원) : 발송시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으며, 수탁자는 동 상품을 2020년 1월 10일에 판매함.
  - ② 2019년 11월 21일 판매장건물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처분 이익 5,000,000원
- (3)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주요 비용항목
- ① 2019년 11월 21일 처분된 판매장건물의 감가상각비 1,000,000원 :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800,000원이며, 전기말 상각부인액은 500,000원임.
  - ② 2019년 12월 14일 시설개체를 위한 생산설비 일부인 기계장치A의 폐기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원 : 기계장치A의 감가상각비는 600,000원이고,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400,000원이며, 전기말 상각부인액은 300,000원임.

- ① 44,900,000원      ② 44,700,000원      ③ 44,400,000원
- ④ 44,100,000원      ⑤ 43,900,000원

23. 거주자 갑의 2019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거주자 갑은 (주)A에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19년 7월 1일에 (주)B로 이직하였다. 2019년 거주자 갑의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 (1) (주)A로부터 수령한 금액(2019.1.1.~2019.6.30.)
- 급여 : 12,000,000원
  - 상여금 : 2,000,000원
  -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 : 5,000,000원(잉여금처분 결의일 2018.12.20.)
  - 식대 : 600,000원(월 100,000원×6개월, 식사는 제공받지 않음)
  - 숙직비 : 200,000원(1일당 실비상당액 20,000원×10일)
- (2) (주)B로부터 수령한 금액(2019.7.1.~2019.12.31.)
- 급여 : 15,000,000원
  - 식대 : 900,000원(월 150,000원×6개월, 식사를 제공받음)
  - 회사규정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 : 1,200,000원(월 200,000원×6개월, 자가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나 여비를 수령하지 않음)
  - 건강검진보조금 : 500,000원
  - 추석명절격려금 : 3,000,000원
  - 자녀학비보조금 : 3,000,000원
- (3)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① 20,650,000원      ② 22,715,000원      ③ 25,265,000원
- ④ 25,690,000원      ⑤ 25,860,000원

24. 거주자 갑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인 상황이다.

	토지 X	토지 Y
거래가액	15억원	6억원
시 가	8억원	10억원

- ① 거주자 갑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에 토지 X를 처분하고 (주)A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7억원을 거주자 갑에게 상여 처분하였다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15억원이다.
- ②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인 거주자 을에게 토지 X를 처분하고 거주자 갑에게 증여재산가액 4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11억원이다.
- ③ 거주자 갑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영리내국법인 (주)B로부터 토지 Y를 취득하고 취득 당시 (주)B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4억원을 거주자 갑에게 상여 처분하였다면, 이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10억원이다.
- ④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인 거주자 을로부터 토지 Y를 취득하고 취득 당시 거주자 갑에게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면, 이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7억원이다.
- ⑤ 거주자 갑이 4촌인 거주자 병에게 토지 Y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10억원이다.

25. (주)A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19년 소득내역의 일부이다.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금액 중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 기타소득을 제외한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15%이다.

구 분	금 액	실제 필요경비
(1)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	2,000,000원	1,000,000원
(2) 대학에 한 학기(4개월) 출강하고 받은 시간강사료	2,500,000원	-
(3) B신문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500,000원	-
(4)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500,000원	1,500,000원
(5) 퇴직한 전 회사로부터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4,000,000원	-
(6) 공익법인이 주최하는 발명경진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은 상금	3,000,000원	-
(7) 「법인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1,000,000원	-

- ① 0원      ② 2,600,000원      ③ 3,800,000원
- ④ 4,000,000원      ⑤ 5,100,000원

26.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③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④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요건을 갖춘 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⑤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금융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27. 거주자 갑의 2019년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1) 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 계	연령	소 득
본 인(여성)	38세	총급여액 60,000,000원
배우자	40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 6,000,000원
부 친	72세	일시적 강연으로 수령한 금액 8,000,000원
모 친	67세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8,000,000원
장 남	16세	소득 없음
장 녀(장애인)	5세	소득 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600,000원과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1,500,000원을 납부하였다.

(3) 부친과 모친은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며, 장남은 기숙사 생활로 별거하고 있다.

- ① 7,500,000원      ② 8,100,000원      ③ 10,100,000원
- ④ 11,600,000원    ⑤ 13,100,000원

28. 거주자 갑의 2019년 자료이다. 갑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 갑의 총급여액 : 50,000,000원

(2) 갑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 ① 본인(40세) : 본인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900,000원
- ② 배우자(36세) :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난임시술비 4,000,000원
- ③ 부친(69세, 장애인)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500,000원
- ④ 모친(64세) : 질병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한약비 1,000,000원

(3) 모친은 국내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 3,000,000원이 있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다.

- ① 750,000원      ② 825,000원      ③ 1,025,000원
- ④ 1,085,000원    ⑤ 1,100,000원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미 납부된 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④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0. 공기정화기 임대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주)M의 201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자료이다. 2019년 제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2019년 1월 5일 : 시가 5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은 매출할인 1,000,000원을 차감한 현금 49,000,000원을 받았으며, 1개월 뒤 판매실적에 따라 시가 2,000,000원의 판매용 상품을 판매장려금품으로 지급하였다.

(2) 2019년 2월 16일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무실 일부를 6개월간 임대해 주고 현금 6,000,000원을 받았다. 이 임대용역의 시가는 9,000,000원이다.

(3) 2019년 2월 25일 : 시가 1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 6,000,000원, 과거에 (주)M이 적립해 준 마일리지 1,000,000원 및 Y통신사 마일리지 3,000,000원을 받았다. 회사는 이 거래에 대하여 Y통신사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1개월 후에 보전 받았으며, 회사와 Y통신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4) 2019년 3월 23일 : 특수관계인에게 공기정화기 임대용역을 12개월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이 용역의 시가는 12,000,000원이다.

(5) 2019년 3월 25일 : 시가 40,000,000원인 회사 사무실 건물 및 시가 30,000,000원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시가 73,000,000원의 공기정화기를 받았다.

- ① 99,000,000원      ② 101,000,000원
- ③ 102,000,000원    ④ 103,000,000원
- ⑤ 133,000,000원

3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3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시외우등고속 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대상이다.
-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 ③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약사가 조제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하는 의약품은 과세대상이다.
- ④ 도서의 공급은 면세대상이지만, 도서에 게재되는 광고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다.
- ⑤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②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이행한다.
- ③ 국내사업장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는 각 사업장 단위로 이행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주사업장에서만 이행한다.
- ⑤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34.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L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및 관련 거래내역이다.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매입세액 내역

구 분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분
원자재구입	60,000,000원	50,000,000원	40,000,000원
사무용 비품구입	3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2) 2019년 6월 20일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를 과세사업으로 옮겨서 과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이 기계는 2018년 7월 7일에 700,000,000원(매입세액 7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3) 회사 공급가액의 비율

구 분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과세사업	60%	70%
면세사업	40%	30%

- ① 125,000,000원
- ② 140,500,000원
- ③ 156,500,000원
- ④ 161,750,000원
- ⑤ 177,500,000원

35. 양계 후 생담으로 판매하는 축산회사 (주)H의 2019년 3월 3일 회사 사옥 및 부수토지 양도 관련 자료이다. 2019년 제1기 예정신고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건물의 구입시부터 1층(100m<sup>2</sup>)은 K은행 점포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2층부터 5층(총 400m<sup>2</sup>)은 (주)H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부수토지의 면적은 300m<sup>2</sup>이다.

(2) 건물과 부수토지를 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3)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

구 분	취득가액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건물	30,000,000원	35,000,000원	40,000,000원
부수토지	20,000,000원	35,000,000원	60,000,000원
계	50,000,000원	70,000,000원	100,000,000원

(4) 건물 취득시 발생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액은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감정평가는 2019년 2월 2일에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5) 회사 공급가액의 비율

구 분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생담판매	60%	70%
부동산 임대수익	40%	30%

- ① 8,000,000원
- ② 10,000,000원
- ③ 16,000,000원
- ④ 40,000,000원
- ⑤ 0원

# 세법개론

36. 맞춤양복 제조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갑의 2019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1) 양복 매출액

내역	공급대가	합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12,000,000원	60,000,000원
현금영수증 발행분	10,000,000원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행분	38,000,000원	

(2) 일반과세자로부터 원자재 매입액

내역	공급가액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20,000,000원	2,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10,000,000원	1,000,000원

(3) 양복 제조에 사용하던 재봉틀을 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새 재봉틀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2019년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은 없으며, 모든 매입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다.

(5)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이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274,000원                      ② 294,000원                      ③ 314,000원
- ④ 424,000원                      ⑤ 0원

37.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환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2019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중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2019년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②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2019년 7월 15일에 신고한 경우, 조기환급이 아니면 2019년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환급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 ④ 2019년 1월에 사업용 기계를 취득하여 2019년 2월 25일에 조기 환급 신고를 한 경우, 2019년 2월 25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⑤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따라 2019년 9월 9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019년 9월 9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원과 최대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 ④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로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9. 거주자 갑의 2019년 증여 관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금 및 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거주자 갑은 성년이다.

(1) 거주자 갑은 2019년 1월 1일 어머니로부터 450,000,000원을 20개월 후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았다. 1년간 대출이자(이자율 연 1%)를 어머니에게 지급하였으며,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다.

(2) 거주자 갑은 2019년 8월 1일 할머니로부터 5필지의 토지(시가 250,000,000원)를 대가없이 증여받았다가 이 중 1필지의 토지(시가 50,000,000원)를 2019년 9월 15일 할머니에게 반환하였고, 1필지의 토지(시가 40,000,000원)를 2019년 10월 28일, 그리고 다른 1필지의 토지(시가 25,000,000원)를 2019년 12월 20일 할머니에게 반환하였다.

(3) 2019년 8월 1일부터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대출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①	20,700,000원	250,000,000원
②	20,700,000원	200,000,000원
③	20,700,000원	160,000,000원
④	16,200,000원	200,000,000원
⑤	16,200,000원	160,000,000원

40. 「지방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②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